

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김인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7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
발 의 자: 김인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성준, 김영철,
김원태, 민병주, 박승진,
박칠성, 서상열, 송도호,
신복자, 왕정순, 유만희,
유정희, 이민옥, 이영실,
이원형, 이종환, 최민규,
한 · 신, 홍국표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이원화되어 있는 치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입법 경제성과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(안 제5조)
- 다.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 규정(안 제7조)
- 라.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치매관리법

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치매관리법」에 따라 치매 예방·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치매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

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·단체·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 사업) ① 시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치매환자의 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
2.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무연고 치매환자 지원
3.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
4. 한의약 등을 활용한 치매 예방 건강증진 사업
5.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여가서비스 지원
6.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)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(이하 “광역치매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
2. 치매관련 자원조사,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
3.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·훈련
4. 치매관련 연구사업
5. 치매인식 개선사업
6.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원
7.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
8.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 및 후견사무 지원
9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

제9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제8조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
2.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
3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
4.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
5. 그 밖에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수준
2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,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
3. 책임능력·공신력
4. 재정적인 부담능력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관련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

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광역치매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와 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두 조례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참고로 안 제7조(지원 사업)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함에 따라 비용발생의 여지¹⁾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) 문의내용 및 각종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**기추진사업²⁾**으로 향후 해당 사업을 확대³⁾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- 1) [구체적 명시에 의한 소요비용 검토 필요성] 현행 같은 조례 제6조(지원사업)제1항제1호와 달리 해당 안의 경우 의료비 지원외 진단비 지원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안 제2호에는 무연고 치매환자 지원(다만, 문의결과 주로 행정적 지원으로 확인), 안 제5호에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여가서비스 지원 등을 명시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개정에 의한 소요비용 발생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
- 2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시민건강국 2025년 <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(국비)> : 24,545,093천원(시비 8,181,698천원) 등
 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(연례반복)
 - 지원대상 :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
 - 사업내용 :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, 맞춤형 사례관리, 인지건강 프로그램, 치매환자 쉼터 운영, **가족지원**, 치매 안심환경 조성, 치매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,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
- 3) [사업확대 미고려] 통상 기추진사업에 대한 사업 근거규정은 ① 확대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발생 여부가 달라지고, 나아가 ② 다양한 지출요인에 따라 적정 확대규모가 정해지므로 해당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지출계획, 예산 한정성, 재정투입 우선순위 등과 같은 **재정지출 영향요소**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, 이에 해당 사안 또한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등)에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현재로서 **별다른 확대계획이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확인**되어 추계 고려사항(통상 불확실성 정보 제외)에서 제외함